

## 투데이 칼럼

## 기후변화시대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CO2를 줄여요

지구 온난화 협상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조율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요즈음 장수군은 75% 이상이 산림으로 산림 소득원 개발과 더불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한 대기환경 정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산림 탄소상쇄제도이다.

이 제도는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때 흡수된 양만큼을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림의 탄소흡수 가능성을 증진시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재제품 및 산림비아오메스 이용, 산지전용 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이 2013년 2월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인정 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의 활용목적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형」과 사회공헌 및 사업자, 흥보를 목적으로 하는 「비거래형」으로 구분된다.



문민섭

장수군 산림녹지과장

2018년 3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총 33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만 1천 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인 26,964tCO<sub>2</sub>를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나무를 심고 지속기능하게 산림을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이나 목재칩과 같은 산림비아오메스 에너지로 대체 사용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목제품을 이용함으로써 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을 유지하는 활동 또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포함된다.

개인, 기업, 기관 누구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등록을 거치면 사업주인이 가능하며, 사업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보조 한다.

아울러 사업 참여 의사은 있으나 적합한 사업대상지가 없는 참여자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사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기도 한다.

대부분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인제군에 개인 소유 사유림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정식 등록되면서 임신물 생산이 아닌 산림탄소 흡수라는 새로운 사유림 경영방식을 통해 산림

소유자에게 또 다른 수입원이 생겨 날 전망이다.

이에 우리군은 군 전체 면적의 75%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어 산림 면적 40,101ha의 탄소흡수원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가 고자 조림, 숲가꾸기 등 매년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00ha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고 있으며,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조성 사업 등 산림이 아닌 토지에도 중점 추진하여 탄소흡수원 조성을 노력할 기운이 고 있다.

아울러 숲가꾸기 및 벌목 부산물(26,072㎥/년)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촉진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자 한다.

앞으로 장수군은 군유림 4,145ha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및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절차를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 강군으로의 도약을 물론 산림자원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배출권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군 자체 소득 창출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설

## 로컬 푸드 육성 3개년 계획에 기대를

전북도가 로컬 푸드와 관련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주목이 된다. 2020년까지 3천6백억 원을 지원해 학교 급식 지원 등 3개 분야를 육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같은 계획은 여러모로 그 유익이 커리는 판단이다. 로컬푸드 소비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고, 도내 농가들의 생산 등을 위해서도 그렇다. 농업 경제를 살리는데 계기가 될뿐더러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농도리는 사실을 강조하는 계기도 뛸 터이다. 그런데 로컬 푸드와 관련해 여기 말이 있다. 지금도 외지에서 온 농산물이 대형 마트의 판매대를 많이 점유하고 있다. 이같은 언급은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했던 바 인식 변화가 생각처럼 뚜렷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들은 로컬 푸드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까닭에 로컬 푸드 문화가 쉽게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제 전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로컬 푸드에 무관심했던 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 로컬 푸드에 대한 인식 재고가 어렵거나 아직은 걸 길이 멀다. 전북도의 로컬 푸드 3개년 계획

## 농지 축소 문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전북도가 농촌 현장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157평방킬로미터의 쌀 재배 농지를 축소해야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2000년 이후 도내 쌀농사 주요지 표를 보면 재배 면적이 점차적으로 줄었음에도 쌀의 재고량은 대폭 늘었다. 그러니 농가들의 쌀 농사 수입도 계속 즐어왔다. 쌀은 쌀이 느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저개발국에 무상 원조를 하거나 가축 사료로 쓰겠다는데 농민들은 그 요구하는 해법이 달랐다. 쌀 수입부터 밭이야 한다고 농가들은 주장했던 것이다.

전북도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겠다. 그것은 삼락농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전북도가 농업분야 발전의 핵심 과제를 밟는 지도 상당한 세월이 지났다. 그리고 전북도의 삼락농정이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로컬 푸드를 위해서 전북도가 3천6백원 규모의 지원을 밟았던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가난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더욱 업그레이드 된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정부가 말했던 쌀 재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놓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